

#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1996. 10.

金 國 新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시기에 형성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脫冷戰期에 접어들어 미·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주요懸案을 대북정책·군사협력·다자간 안보협력의 3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韓·美 安保協力關係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시나리오 작성을 통하여 전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懸案 및 變化 可能性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冷戰時期의 韓·美 安保關係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하고 다음해 1954년 11월 18일 이를 發效시켰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 후 한국방위의 기초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비단 군사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모든 관계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 미수사건과 동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을 계기로 한국방위에 대한 양국간의 認識差異를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측은 청와대기습 미수사건을 중대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은 단순한 공해상의 사건으로 인식한 반면, 미국측

은 청와대기습 미수사건을 단순한 무장공비 침투로 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나 푸에블로호 피습사건은 중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월남파병에 따른 군사협력 필요성과 아울러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안보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協議·調整할 필요성을 느낀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급의 연례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1968년 5월 제1차 韓·美 安保協議會議을 개최한 이후 한·미 양국은 연례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점진적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統合作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 설치에 합의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발족되자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 게로 이양되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됨으로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국제법적인 근거를 둔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관계는 현재의 상태로 구체적인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즉 군사정책이나 전략의 樹立·討議·調整은 한·미 군사위원회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작전면에서 具體化시키는 작업은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시행하며,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훈련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초까지 한·미관계는 한국이 미국에 依存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군사·경제적 혜택을 누려 왔으나 이러한 관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기조로 돌아서면서 점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 점차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켰으며 이와 함께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점차 對等한 同伴者關係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8년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측과 연합방위 증강 사업비로 1989년 4천 5백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의 경제사정, 북한의 위협수준, 미국내 정치·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한·미 연합군의 방위력 증강, 한국군의 자율성 증진, 한·미간 방위비 분담 등에 관한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미국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對蘇 封鎖政策의 一環으로 추진되어 온 對韓半島 정책은 한·미 연합군의 방위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냉전기간 동안 북한이 북·미간 직접협상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며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1980년대말 세계적으로 탈냉전 무드가 확산되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1988년 10월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일련의 제한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同年 12월 6일 북한과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한 이래 북한 핵개발 문제가 점차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자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誘導하였다.

## 2. 脫冷戰期的 韓·美 安保關係

한·미간에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유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추진, 남북한 평화협정체결의 當事者 原則 등 대북정책의 일반적 원칙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共和黨 주도의 의회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美國무부도 한국이 경수로 지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북관계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南韓排除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별로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미·북관계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미·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連繫問題 및 미·북관계 개선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조정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頂上會談에서 한·미 양국은 ①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문제는 분리하여, ②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며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③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중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共同提議하였다.

1995년 2월 美國방부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 또는 「동아시아 전략보고」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다. 新亞·太戰略은 냉전종식 직후 부시 행정부가 작성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3단계 감축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적어도 2000년까지 현 10만명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외교·군사적 參與政策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신아·태전략에서 미국은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관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지·증진시키는 국가 목표 차원에서 核心 要素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종식된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관련된 한·미 양국간 안보유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를 表明하고 있다.

脫冷戰期 한·미 군사협력관계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정세의 不確實性을 감안하여 철수계획을 白紙化하고 계속 주둔을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보다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려 하는 한편, 미국은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자국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는 바,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력 증강, 한국의 방위분담금 증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이양 등의 문제를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양자간 안보협력과 並行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함과 아울러 북한을 이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탈이념적 經濟優先主義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므로 다자간 안보대화는



장기적으로는 점차 制度化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加速化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美·日 新安保共同宣言이 채택된 이후 동북아시아의 勢力構圖는 미국·일본 對 중국·러시아의 대립으로 可視化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한반도 주변정세가 國際的 共助體制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3. 韓·美 安保關係의 變化 展望

한·미 안보관계 변화의 決定要因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 변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의 정치적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의 변화요인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성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 양태를 ①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②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의한 독일식 흡수통일, ③ 미·북 관계개선에 따른 남북한 평화공존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변화를 推論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간 군사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하게 되면 미국은 기존의 주한미군 이외에 약 40만명의 병력을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은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에 의하여 북진통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신속한 작전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미 양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敵對的인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적 紐帶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외세의 개입이 차단되면 한국은 서독이 동독을 통합한 방식으로 북한을 吸收統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미 양국의 군사적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남북한 평화통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가 요구된다. 중국의 우호적 또는 中立的 태도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수립문제는 한·미간 안보협력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한·미 양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협력관계로 전환된다면 한·미 양국은 군사적 동맹을 유지해야 할 근거인 共同的 敵에 대한 동질적인 威脅認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미간 안보협력은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함께 형성하게 될 多者間 安保協力體 틀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고 북한이 제네바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미·북관계는 일단 순조롭게 개선될 것이다. 미·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병행하여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은 미·북관계 개선의 速度와 範圍에 관한 견해

차이로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한·미간 대북정책의 불협화음은 특히 특별사찰 및 국교정상화 시점을 둘러싸고 증폭될 우려가 있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간 국교가 수립되는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감소하는데 비례하여 한·미 군사협력관계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미·북간 국교가 수립되면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되고 주한미군은 일정 수준 감축되어 補助的 位置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달성되면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한 迅速對應軍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4. 韓·美 安保協力 發展 方案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安着시킨다는 대북 包容政策에 입각하여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화·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敵對的 現實과 북한체제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미간 협력관계는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共助體制의 핵심은 한국이 主導的 役割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북한지도층이 체제붕괴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미·북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앞서 개선되어 가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따라서 韓·美 共助體제도 대북 협상과정에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 한·미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좁은 의미보다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는데 한·미 양국이 협력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의 對北政策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開放·改革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封鎖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미 軍事同盟體制가 확고함을 과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배양하여 한국이 점차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 국방능력이 향상되면 북한 지도층도 대미 평화협정 요구가 무의미함을 시인하고 한국과의 평화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전쟁억지만을 위주로 한 한·미 안보협력은 더 이상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地域情勢의 不確實性內에 潛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축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도 주도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流動性에서 초래되는 安保 不確實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目 次 -

第 I 章 序 論 .....	1
第 II 章 冷戰時期的 韓·美 安保關係 .....	4
1. 韓國의 一方的 對美 依存期 .....	4
2. 對等한 同伴者關係 摸索期 .....	10
第 III 章 脫冷戰期の 韓·美 安保關係 .....	16
1. 對北協商 分野 .....	17
2. 軍事協力 分野 .....	26
3. 多者間 安保協力 .....	35
第 IV 章 韓·美 安保關係의 變化 展望 .....	43
1. 南北韓 戰爭 再發 境遇 .....	43
2. 北韓의 急激한 崩壞 境遇 .....	46
3. 南北韓 平和共存 境遇 .....	48
第 V 章 韓·美 安保協力 發展 方案 .....	51
1. 基本方向 .....	51
2. 部門別 推進方案 .....	53
가. 對北政策 協力方案 .....	53
나. 軍事協力 增進方案 .....	57
다. 多者間 安保協力 推進方案 .....	61
第 VI 章 結 論 .....	63
參 考 文 獻 .....	65

## 第I章 序 論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50여년간 굳건한 안보협력과 폭넓은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소련에 대한 封鎖政策 위주로 진행되어 온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한·미 군사협력 관계는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에 따라 영토분쟁, 북한의 핵개발, 중국과 일본의 霸權競爭 가능성 증대 등 安保 不確實性이 증대하자 한·미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성숙된 우호 협력관계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직면하여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체제의 위기로 인한 도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防衛公約을 거듭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외무·국방·경제 부처들의 閣僚會談 및 의회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대북정책과 양자간의 懸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탈냉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세계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膠着狀態가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對北 包容政策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감에 따라 한·미간 政策 優先順位에 대한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향후 韓·美 安保協力關係의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 및 남북관

계 변화 양상과 밀접히 連繫되어 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경우 한·미 양국은 더 한층 긴밀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어 남북한이 獨逸式 統一을 이루게 된다면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유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장기간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가운데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체결한 미·북 기본합의문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미·북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군사협력을 軸으로 유지되어 온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상당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탈냉전기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韓·美 軍事同盟의 근거가 변화하면 한·미 양국은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政策方向을 摸索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시기에 결성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脫冷戰期에 접어들어 미·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주요 懸案을 분석한다. 아울러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시나리오 작성을 통하여 전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懸案 및 變化 可能性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안보협력 문제는 한국의 경제역량과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韓半島 問題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및 UN을 통한 평화유지 활동 등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미 안보협

력에 관한 연구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된 狹義의 영역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최근 정치학자들은 安保 概念의 적용 범위를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제한하지 않고 정치·군사·경제·사회·환경·테러·마약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는 아직 냉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정치·군사적인 것이 主種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핵심 문제를 대북정책·군사협력·다자간 안보협력으로 나누고 이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 第Ⅱ章 冷戰時期的 韓·美 安保關係

### 1. 韓國의 一方的 對美 依存期

1945년 9월 미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軍政을 실시하며 국내치안을 유지하였다. 그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주둔한 소련 당국과 통일된 단일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한국의 戰略的 重要性을 낮게 평가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구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이란, 터키 및 그리스 등에서 영향력을 증대해가자 당시 트루만(Harry S. Truman) 美대통령은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여 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을 발표하고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集團防衛體制를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군사기지를 유지해야 할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군은 한반도에서 1949년 6월 30일까지 전원 철수하고 500여명의 美군사고문단만 잔류하게 되었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Acheson) 미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에 관한 공식선언」을 통해 미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전초방위선이 알류산-일본-유구(Ryukyu)열도-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sup>1)</sup> 한국이 미국의 極

1) Sejin Kim, ed., "Speech by Secretary Acheson on a Review of United

東防衛線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이 미국의 안보이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를 포기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南侵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9년 10월 중국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 특히 일본의 안보를 우려하게 된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돌발하자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돌변하여 즉각 軍事的 介入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背後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한국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한 것이다. 1950년 6월 30일 미극동군사령부는 한국전쟁에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고 미군은 7월 1일 북한군과 최초 접전을 전개하였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의 통솔하에 통합군 사령부의 설치를 권고하는 決議案을 채택하자, 미국은 7월 25일 유엔군 사령부의 설립을 선언하고 美極東司令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sup>2)</sup> 그 후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

States Policy to 1950, January 12, 1950,"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83~89.

2)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決議案에는 통합군사령부(The Unified Command)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1950년 7월 25일부터 유엔군사령부(The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이 공식용어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p. 17~18.; 金明基, 「駐韓國際聯合軍과 國際法」(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90, p. 84 참조.

한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의 조속한 격퇴를 위한 단일 작전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엔군 사령관에게 作戰指揮權을 이양하였다. 따라서 1950년 7월 19일 이후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을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측이 休戰協定을 체결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하며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측이 한국군도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정부는 휴전협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측에 韓·美 相互防衛條約의 체결과 경제·군사원조를 요구하였다.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측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통일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으며,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충격을 주었다. 한편 전쟁기간 동안 막대한 희생을 치루었던 미국으로서는 점차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한국이 자유주의 국가로서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위신과 國益에 이롭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調印하고 다음해 1954년 11월 18일 이를 發效시켰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 후 한국방위의 기초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비단 군사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모든 관계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1954년 11월 4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을 체결하고 한국군의 戰力強化를 위해 군사원조를 실시하였다. 전후 한국은 국방예산을 급격히 증가

시켰지만 경제력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군사비 중에서 미국의 군사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높았다. 1955~1960년 기간동안 한국 총군사비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 군사원조는 58.7%, 간접적 군사원조는 17.9%를 차지하게 되었다.<sup>3)</sup> 사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疲弊된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군사장비를 비롯한 실질적인 방위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美國主導의 한국방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국가의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협의하고 합의하에 조약을 실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에 별도의 協議機構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 전투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증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 미수사건과 동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을 계기로 한국방위에 대한 양국간의 認識差異를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측은 청와대기습 미수사건을 증대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은 단순한 公海上의 사건으로 인식한 반면, 미국측은 청와대기습 미수사건을 단순한 무장공비 침투로 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나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은 증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미국측은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비밀협상을 전개하여 선원들의 歸還에 관해 합의했다.<sup>4)</sup> 월남파병에 따른

3) 河英善, “韓美軍事關係: 持續과 變化,” 具永錄 外 共著, 「韓國과 美國: 過去, 現在, 未來」 (서울: 박영사, 1983) p. 195

군사협력 필요성과 아울러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안보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協議·調整할 필요성을 느낀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급의 연례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1968년 5월 제1차 韓·美 安保協議會議(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개최한 이후 한·미 양국은 연례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1960년대 말기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소모적인 월남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침체되어 갔다. 한편 국제적으로 중·소간 분쟁이 격화되는 반면 미·소간에는 핵 전력 균형을 통한 데탕트가 시작되자 미국내 여론은 新孤立主義 경향으로 기울어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닉슨(Richard M. Nixon)대통령은 1969년 7월 괌도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sup>5)</sup> 닉슨 독트린의 요체는 ① 미국은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하고, ② 우방이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핵우산을 제공하고, ③ 그 밖의 종류의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은 적절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該當國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닉슨 독트린에 따른 아시아에서 미국역할의 축소는 駐韓美軍의 축소로 연결되었다. 미국은 1971년 3월 27일 미육군 제7사단의 2만명 병력을 철수시켜 주한미군의 규모는 6만 3천명에서 4만 3천명으로 감축되었다.<sup>6)</sup> 한편 미국은 주

4) 양성철·문정인, “한·미안보관계의 재조명: 푸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 리사례를 중심으로,” 김덕중 외 공편, 「한·미관계의 재조명」(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47~75 참조

5) Se-Jin Kim, ed., “American Policy in the Pacific(Nixon Doctrin): Informal Remarks of President Nixon with Newsmen at Guam, July 25, 1969,”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358~361.

한미군 철수를 계기로 한국군 현대화 및 방위산업 건설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 건설을 위하여 군사과학기술자료(Technical Data Package: TDP)를 제공하고 M-16소총, 500MD 헬리콥터, F-5E/F 전투기 등을 공동생산하여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다.<sup>7)</sup> 그리고 한국은 1973년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금융·세제·계약·원가계산 등에 特惠를 주어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한편, 1974년 1월 미국과 월맹간에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북한은 베트남 방식을 모방하여 한국을 고립시키고자 미국에 대한 평화공세를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최초로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1975년 9월 제3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각서를 통해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實質的 當事者는 북한과 미국이므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전쟁의 실질적인 交戰者였으며 한국을 排除시키면 평화협정은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제안을 거부하였다. 당시 키신저 미국무장관은 미·북간 직접협상 대신 한반도 주변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또는 미국·중국·남북한의 4

6) 吳寬治 外 共著, 「韓·美 軍事協力關係의 發展과 展望」(서울: 世經社, 1990), p. 62 참조.

7) 황동준, “미국의 대한안보지원정책과 한국의 방위산업,” 김덕중 외 공편, 「한·미관계의 재조명」, pp. 225~226 참조.

8)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제Ⅲ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858; 姜元植 外 共著,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 6 참조.

者會談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였다.<sup>9)</sup> 이같이 미국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주한미군 감축과 월남 패망에 따른 북한측의 誤判을 방지하기 위해 1976년부터 주한미군·美본토 증원군·한국군 등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전개하여 對韓 방위의지가 확고함을 표명하였다.

## 2. 對等한 同伴者關係 摸索期

미국 외교정책에서 人權問題를 안보문제와 결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카터(Jimmy Carter)가 1976년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카터는 취임 직후 1977년 3월 9일 기자회견에서 4~5년 이내에 한국으로부터 모든 미군 地上戰鬥兵力을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10)</sup> 1977년 7월 25일~26일 개최된 제10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서 브라운(Harold Brown) 미 국방장관은 1978년말까지 6천의 병력이 철수할 것이며 나머지 지상전투병력의 철수는 신중히 段階的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국무부·국방부 관리들과 주한미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미국의 월남전 실패에 뒤이은 그러한 철수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발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의회의 강력한 압력과 북한의 군비증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9) 許文寧,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 27 참조.

10) 최규장, 「외교 정책 결정 과정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백지화 과정 연구」(서울: 을유문화사, 1993), p. 188 참조.

의해 원래 계획된 6천명 대신 3천6백명만이 1978년 말까지 철수 하였으나 그 이상의 전투병력 철수는 중단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① 남북한간 분쟁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②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③ 남북한간 군비경쟁이 加速化되는 반면, ④ 미국이 약속한대로 한국방위에 필수적인 방공지원 군사요원이 한국에 주둔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어차피 미국은 介入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전면 白紙化한 것이다.<sup>11)</sup>

한편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점진적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統合作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설치에 합의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발족되자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되었다.<sup>12)</sup> 그런데 한·미 연합사령부는 미군 4성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한국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며 산하 6개 참모부는 한·미군간의 균등한 人事配分の 원칙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한국이 부분

11) Charles A. Sorrels, *Planning U.S. General Purpose Forces: Forces Related to Asia*, (Washington, D.C.: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77); 國防大學院 翻譯, 「美國의 아시아 安保政策과 通常戰力」 (서울: 국방대학원, 1979) pp. 140~141 참조.

12) 연합사와 유엔사는 별도의 창설근거를 갖고 있는 별개의 법적 군사기구이다. 연합사는 한·미간 양자협정에 의해 설립된 군사기구이고, 유엔사는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군사기구로서 부여된 임무 및 지휘계통, 작전통제부대가 상이하다. 그러나 현재 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은 동일인이며, 연합사 참모 중 일부가 유엔사 참모로 임명되어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p. 110 참조.



적으로 作戰統制權을 회복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됨으로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국제법적인 근거를 둔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관계는 현재의 상태로 구체적인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즉 군사정책이나 전략의 樹立·討議·調整은 한·미 군사위원회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작전면에서 具體化시키는 작업은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시행하며,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훈련은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초까지 한·미관계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군사·경제적 혜택을 누려 왔으나 이러한 관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기조로 돌아서면서 점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978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를 중단하고 해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借款事業으로 바꾸었다. 이같이 한국은 군사비를 전적으로 자체충당하는 가운데 한·미간 防衛費 分擔問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 발족한 한·미연합사(CFC)는 운영비를 미국과 한국이 62대 38로 분담하고 소속요원의 인건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한·미간 방위비를 분담하는 선례가 되었다.<sup>13)</sup> 198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 점차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켰으며 이와 함께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점차 對等한 同伴者關係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은 카터의 人權外交를 白紙化하고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국방

13) 文昌克, 「한미 갈등의 해부」 (서울: 나남, 1994), p. 135 참조.

비를 대규모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우방국에 대한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미지상군 전투병력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對蘇 強硬 政策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의 對北 抑止力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레이건의 집권기간(1981.1~1989.1) 동안 미국은 무역수지 및 재정적자가 악화된 반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어 가자 미국은 對韓 안보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1979~1981년중 한국의 防産物資 수출실적은 전체 제3세계 국가 중에서 4위를 占有하였다.<sup>14)</sup>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이 미국의 同種 방산물자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미국과의 상호보완관계라기 보다는 경쟁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첨단기술 移轉을 기피하는 한편, 한국 방산제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자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특허료 지불을 요구하였다. 한국을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지원 대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된 미국은 1987년 FMS차관을 중단하고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防衛費 分擔을 요구하게 되었다. 美의회는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내세워 더 이상 미국이 우방의 국방부담까지 맡을 수 없다는 논리로 1987년부터 NATO 회원국·

14) 황동준, 「미국의 대한안보지원정책과 한국의 방위산업」, 김덕중의 공편, 「한미관계의 재조명」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 231 참조.

일본·한국 등 우방에게 방위비의 분담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1988년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측과 연합방위 증강 사업비로 1989년 4천 5백만달러, 1990년 7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sup> 그 후 한·미 양국은 한국의 경제사정, 북한의 위협수준, 미국내 정치·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한·미 연합군의 방위력 증강, 한국군의 자율성 증진, 한·미간 방위비 분담 등에 관한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미국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對蘇 封鎖政策의 一環으로 추진되어 온 對韓半島 정책은 한·미 연합군의 방위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북·미간 직접협상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이 排除된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며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1980년대말 세계적으로 탈냉전 무드가 확산되자 變化의 可能性을 보여주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공산권 국가들의 참여를 誘導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有和的 태도를 취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무부는 1987년 3월 미국 외교관의 북한 관리와의 접촉을 허용하였다<sup>16)</sup>. 1988년 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

15) 1989년 7월 19일 발표한 第21次 韓·美 年例安協協議會議 共同聲明書, 國際問題研究所, 「防衛年鑑, 1990-1991」(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90), p. 732;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서울: 국방부, 1994), p. 114 참조.

16) *Wall Street Journal*, March 10, 1987; 兪光震, “北韓의 對美外交政策,” 閔丙天 編著, 「北韓의 對外關係」(서울: 大旺社, 1987), p. 179 참조.

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지 및 북한에 대한 전향적 정책을 천명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미국은 1988년 10월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일련의 제한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미국 정부는 외교관들에게 제3국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학술·문화교류 목적의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의 북한방문을 장려하였으며, 人道主義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들의 對北韓 수출을 事案別로 허용하였다.<sup>17)</sup> 그리고 1988년 12월 6일 미국은 북한과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개시하였다.<sup>18)</sup> 그러나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한 이래 북한 핵개발 문제가 점차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자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誘導하였다. 미국 경제력의 약화와 탈냉전의 국제적 무드에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듯한 추세를 보였던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북한의 核武器 開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17) Zachary S. Davi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p. 5; 吉姪宇 外 共著,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61 참조.

18) 참사관급 접촉에서 북한은 ① 美·北韓 협의 채널의 격상 ② 美·北韓間의 직접대화 및 관계개선 ③ 주한미군 철수 ④ 停戰協定の 평화협정 代替 ⑤ 한국전 참전 美軍 유해송환을 위한 협의 등을 주장하였다. 國際問題研究所, 「防衛年鑑, 1990~1991」(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90), p. 218 참조.

### 第三章 脫冷戰期の 韓·美 安保關係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봉쇄정책에서 包容政策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의 성격은 단순한 군사협력 위주에서 탈피하여 복합성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먼저 대북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와 對北協商과 어느 정도 무관하게 전개되는 한·미 군사협력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발전수준이 낮은 현상에서는 대북협상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未分化되어 상호 連繫되어 있는 반면, 대북협상과 무관한 한·미 군사협력 문제들은 상당히 細分化되어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북핵협상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國際化되어 한·미 안보협력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한·미 양국은 양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多者間 安保協力을 증진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향후 미·북관계가 개선되고 다자간 안보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미 안보협력 문제는 다차원적인 綜合的 分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북관계 발전의 초기단계인 현상에서는 대북관련 協商案件, 한·미간의 군사협력,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기 별개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미간 안보협력 분야를 대북협상, 군사협력, 다자간 안보협력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북한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문제들은 그 성격이 경제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간에 구별하지 않고 일단 대북협상 분야에서 취급한다.

## 1. 對北協商 分野

북한 핵문제는 1989년 프랑스 인공위성 스포트(SPOT)호가 촬영한 영변지역의 사진이 核爆彈을 제조하기 위한 군사목적의 핵시설로 判明되면서부터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자 미국과 한국은 共同步調를 취했다. 미국은 북한과 참사관급 접촉을 통하여 한국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核査察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이 전술 핵 감축선언을 발표하자,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非核化宣言을 발표하여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과 생화학무기의 전면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 핵문제를 기존의 封鎖政策의 연장선상에서 다룬 부시(George Bush) 행정부는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북한과 협상수준을 格上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1993년 1월 클린턴(Bill Clinton)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요구를 受容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美·北間 高位級會談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1993년 6월 2~11일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sup>19)</sup>이 개최된 이후 1994년 10월 21일 제네

19) 미국과 북한은 1993년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994년 7월 8일 제3단계 고위급회담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날 김일성이 急死함으로써 회담이 중단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8월 5~12일 제

바 미·북 기본합의문이 채택될 때까지 한·미 양국은 경제제재 및 군사적 응징까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지만 對北 宥和策 이외에는 모두 현실적인 代案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경제제재는 중국의 참여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는 방안이었고, 군사적 응징<sup>20)</sup>은 한반도 전체를 廢墟化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한·미간에 政策的 優先順位가 달라 협상의 구체적인 事案들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특별사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NPT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북한핵의 過去 透明性 확보보다는 未來 核凍結에 중점을 두어 북한과 협상을 타결지었다.<sup>21)</sup> 그 결과 제네바 합의문에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인 남북화해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缺如되어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보면 탈냉전기 미국이 새로

3단계 1차 고위급회담을 속개하였고, 9월 23일~10월 17일까지 제3단계 2차회담을 진행하였다. 미·북 고위급회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吉炅宇 外共著,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鄭玉任, 「北核 588日: 클린턴 行政府의 對應과 戰略」(서울: 서울 프레스, 1995);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서울: 도서출판 경당, 1995) 참조.

20) John M. Collins, *Korean Crisis, 1994: Military Geography, Military Balance, Militar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1, 1994), pp. 14~21.

21) Michael J. Mazarr,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 149~151, 169~176.

은 安保戰略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sup>22)</sup> 클린턴 행정부는 介入·擴大戰略에 입각하여 냉전시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一環으로 유지해 온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즉,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여 북한을 일단 미국의 영향권안에 包容하고, 對北 宥和策을 계속 제공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軟着陸」(soft-landing)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중·장기적인 청사진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급 정책 담당자들은 국내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美행정부의 실무자들은 북한 내부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事態對應의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sup>23)</sup>

한·미간에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유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추진, 남북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원칙 등 대북정책의 일

- 
- 22) 새로운 전략의 골격은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미군의 해외주둔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개입을 유지하고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략은 탈냉전기 새로운 환경에서 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② 지역분쟁에 의한 지역정세의 불안정, ③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의 민주화 개혁의 실패 위험성, ④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4대 주요 위협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pp. 5~6.
- 23) 로버트 매닝(Robert A. Manning), "대북정책: 우왕좌왕 한국 무전략 미국," 「신동아」, (1995.10), pp. 262~273 참조.



반적 원칙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共和黨 주도의 의회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24)</sup>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제네바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상호 핵사찰, 南北 合同軍事委員會 설치 등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수차례 채택한 바 있다. 미국무부도 한국이 경수로 지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북관계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南韓排除原則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별로 취하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 견해차이는 同盟關係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에서 용해되어 원만히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國益의 차이가 있는 한편, 양국 모두 북한정세에 관해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정부담 문제에서는 앞으로 계속 긴밀한 토의를 거쳐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懸案으로서의 경수로 및 중유 지원 문제, 쌀지원 문제, 경제제

24) 1994년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 헬름스(Jesse Helms) 상원외교 위원장, 머코스키(Frank H. Murkowski) 動資 위원장, 토머스(Craig Thomas) 의원 등 보수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경비지출은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金國新,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p. 49~58; 金昌秀, “金日成 死後 美·北關係의 發展方向,” 「政策研究」 (通卷 第116號, 1994, 4號), pp. 118~132 참조.

재 완화 문제, 북·미 군사접촉 및 평화협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 輕水爐 공급 협상과정에서 북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형 경수로의 모체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CE-80모델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한·미 양국간에 외교적 마찰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한국의 입장을貫徹시키는 방향으로 경수로 회담을 진행시켜 1995년 5월 19일 ~ 6월 12일 팔라룸프에서 열린 美·北 準高位級會談에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수용하도록 하였고, 1995년 12월 15일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서 북한 경수로 건설 지원과정에서 한·미간 役割分擔 문제에서는 큰 이견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나 총 55억달러<sup>25)</sup> 규모의 경수로 費用分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 경수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美행정부는 정부 예산지출과 관련한 의회의 강력한 牽制로 인해 경수로 비용부담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로 북한측에 反對給付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적·법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食糧事情 惡化를 이유로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대북지원에

25)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문이 채택될 당시 전문가들은 대북 경수로 지원비용이 약 4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1996년 7월 15일 KEDO에 제출한 견적서에서 경수로 2기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증가된 50~6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정우, “대북 경수로공급사업 총점검: 마무리협상 끝나면 카운트 다운만 남아,” 「통일한국」 (1996년 8월), p. 96 참조.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食糧難 등 대북정세 인식 및 대북협상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관해서 異見을 보이고 있다. 1996년 1월 24~25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미국·일본 3국 고위급협의회<sup>26)</sup>에서 한국측은 북한의 식량사정은 8~9월까지 지탱가능하며 북한정세가 비교적 불안하지만 급격한 붕괴 우려는 없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측은 3~4월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한계에 도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급격히 붕괴되거나 對南 軍事的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미국과 일본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① 식량부족분에 대해 공신력있는 조사가 선행되고 ② 軍糧米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방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조사와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나 북한의 긴박한 식량사정으로 볼 때 이를 前提條件化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놀룰루 회담후 한국측은 당분간 정부차원의 대규모 쌀 추가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으나, 미국은 對外災難救護基金을 재원으로 해서 세계식량계획(WFP)을 거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였다.<sup>27)</sup>

미국은 1995년 1월 20일 제1단계 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는데 있어 아직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북관계만 진전시키면 안된다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완화 수준을 最小限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1996년 2월

26) 1996년 5월 13~1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2차 한·미·일 고위급협의회에서도 한·미간에는 대북 식량지원 방법 및 경제제재 완화조치 시점에 관해 약간의 異見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27) 「조선일보」 1996년 2월 1일자 참조.

부터 미국은 남북관계가 膠着된 상태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 완화조치는 不可하다는 한국측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sup>28)</sup>. 미국은 현재 제3국을 통한 미국 기업의 對北 投資를 허용하고 美은행과의 금융거래를 북한에 허용하는 등 총 25개 항목에 걸친 대북 경제제재 완화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9)</sup> 그러나 조만간 제2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핵심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들은 여전히 미국의 手中에 남아있게 되었다. 대북 경제제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기업의 직접투자 금지, 수출신용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향후 나머지 대북 경제제재완화 조치들을 몇단계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북한의 태도변화와 連繫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4년 12월 17일 주한미군 헬기 1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 不時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과 將星級 接觸을 지속해 오고 있다. 미국은 1996년 1월 10~12 하와이에서 제1차 미군유해 송환협상, 4월 20~21일 미사일 수출통제협상,<sup>30)</sup> 5월

28) 「한국일보」 1996년 2월 4일자 참조.

29) 미국이 마련한 25개 항목의 제2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 내용은 ① 美해외 현지법인의 대북투자 허용, ② 대북 수출허용 품목 확대, ③ 선박 및 전세기 북한입국 허용, ④ 美은행을 통한 송금 허용, ⑤ 미국인 여행자의 북한 내 신용카드 허용 등 본격적인 교류확대에 대비한 지원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 1996년 5월 3일자 참조.

30) 미국은 미사일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이란·시리아 등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안에 묶어 두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미국이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10일 뉴욕에서 제2차 미군유해 송환협상<sup>31)</sup>을 개최했다. 한국은 미국측에 軍事停戰委員會 이외의 별도 접촉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군사정전체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군부와와의 대화채널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美國무부는 미국이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면, 판문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휴전선에서의 돌발적인 위기상황의 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과 군사대화채널 유지를 원하고 있다. 북한측은 미군유해 송환협상 및 미사일 수출통제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협상 수위를 政治的 次元으로 높여 미국과 단독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관해서는,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1996년 2월 22일 북한 외교부는 평화협정의 전단계 조치로 미·북간 暫定協定<sup>32)</sup>을 체결하고 군사

31) 제1차 미군유해 송환협상에서 북한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판문점을 통해 미군에 인도한 162구의 미군유해에 대한 대가로 4백만달러를 요구하고 미국은 1백만달러를 제안함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2차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2백만달러 가량의 금액에 합의를 봄으로써 협상을 타결하였다.

32) 북한은 1995년초부터 미국이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中間段階措置를 고려해도 좋다는 좀 더 교활한 제안을 하고 있다. 1995년 북한을 방문해 9명의 북한 고위관리를 만나고 온 해리슨에 의하면, 북한은 미·북간에 相互安保協議委員會를 가동시키고, 이 위원회의 가동준비가 끝나는 시점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자는 내용의 중간단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Salig S. Harrison, *The US-DPRK Nuclear Agreement and the US-ROK Alliance: View from Pyongyang*,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미·북 공동군사기구의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북한이 제의한 잠정협정 체결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을 추구하며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한·미간 對北 協商 戰術에서 차이가 노정되게 되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미·북관계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미·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한·미간에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연계문제 및 미·북관계 개선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조정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頂上會談에서 한·미 양국은 ①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문제는 분리하여, ②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며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③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원칙에 합의하였다.<sup>33)</sup>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중국 대표간의 4者會談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共同提議하였다. 미국은 제주도 공동선언을 통하여 미·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表明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으로서는 同 共同宣言을 통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連繫政策을 사실상 緩和시키게 되었다.

---

University and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S Army War College(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S-ROK Alliance 1995.10) pp. 1~6.

33) 民族統一研究院,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6.5), pp. 3~5 참조.

## 2. 軍事協力 分野

미국과 소련은 동구 사회주의권 변혁을 계기로 1989년 12월 2~4일 몰타(Molta)정상회담을 개최하고 冷戰終熄에 합의하였다. 즉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얄타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서 냉전질서를 청산하고 상호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소련과 화해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세계적 차원에서 戰略均衡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부시 행정부는 탈냉전기에 미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防衛費 縮小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을 모색하였다. 1990년 4월 미국방부는 「21세기를 지향한 아·태지역 전략 틀」<sup>34)</sup>이라는 題下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 보고서를 발표하고, 동아시아 주둔 미군 및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하기 위한 3단계의 撤軍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해 미국은 제1단계에서(1990~1992) 약 7,000명을 철수하여, 1990년 당시 44,000여명이던 미군의 숫자가 37,0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은 제2단계(1993~1995)에서 주한미군을 더 감축하여 1995년 주한미군 숫자를 30,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核威脅이 증대하자 미국방부는 1992년 제2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지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에스펜은 1993년 9월 「밑으로부터의 검토」(Bottom-Up Review, BUR)<sup>35)</sup>라는 제목하에

34)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Dept. of Defense, April 18, 1990); 곽태환,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함택영 공저,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278~279 참조.

탈냉전 이후 최초의 包括적인 국방정책보고서를 제시하였다. BUR에서 미국은 탈냉전 이후 예상 가능한 「中強度 地域紛爭」(mid-intensity regional conflict)으로 중동지역과 한반도를 제시하고, 「2개 지역분쟁 동시대응전략」(Win-Win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戰力規模를 25개 육군사단 및 여단(현역 10개, 예비 15개), 12개 항모전투단(실전배치 11개, 예비 1개), 5개 해병여단 및 1개 예비사단, 그리고 20여개의 비행단(현역 13개, 예비 7개)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방부는 1994~1998년간 중 총군사력의 17%를 감축하되 전역 미사일 방위강화, 군장비의 현대화, 戰時物資 事前備蓄 등을 통해 신속대응을 위한 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탈냉전 이후 미국방예산의 절대적 감축으로 인하여 Win-Win戰略을 뒷받침할 군장비의 현대화가 안되고 있다며 Win-Win전략의 실질적 수행능력에 懷疑를 표명하고 있다.

1995년 2월 美國방부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sup>35)</sup> 또는 「동아시아 전략보고」(East Asia Strategy Report: EASR)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다. EASR은 냉전종식 직후 부시 행정부가 작성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3단계 감축안을 완전히 廢棄하고 적어도 2000년까지 현 10만명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동북아에 대한

35) Les Aspin, U.S. Secretary of Defense, *The Bottom-Up Review: Forces for a New Era*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1 September, 1993).

36)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미국의 경제·외교·군사적 參與政策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EASR에서 미국은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관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지·증진시키는 국가목표 차원에서 核心 要素라고 記述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종식된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관련된 한·미 양국간 안보유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기존의 쌍무안보동맹을 유지하고 다자간 안보협력도 점차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 미국이 이지역에서 安定者·均衡者(balancer)·정직한 仲裁者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아·태전략에서 미국이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기간까지 한·미동맹 유지와 미군의 주둔을 상정한 것은 한반도의 戰略的 重要性을 미국측에서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7)</sup>

탈냉전기 한·미 군사협력관계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정세의 不確實性을 감안하여 철수계획을 白紙化하고 계속 주둔을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한국

37) 김창수 박사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어 주한미군의 對北抑制 역할이 의미를 상실한 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희망한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既得權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김정익 박사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아·태전략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목표인 지역 안정과 패권세력 방지를 위한 한국의 기여도 및 戰略的 價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 군사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탈냉전 이후 남북한의 안보 및 경제사정과 주변국가들의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의 위협 하나만으로는 21세기까지 한·미 군사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金昌秀, “美國防部 新東亞 太安保戰略 報告書의 背景과 意味,” 『週刊國防論壇』(제573호, 1995.3.13); 김정익,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국국방,” 『국제정치논총』(제35집 2호, 1995), p. 281 참조.

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보다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려 하는 한편, 미국은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자국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는 바,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력 증강, 한국의 방위분담금 증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이양 등의 문제를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懸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韓·美 聯合防衛力 增強問題

북한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1990년 99만명이었던 병력을 1995년말 1백4만명으로 증가시키고, 在來式 武器는 물론, 최신 大量 殺傷武器의 생산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84년 사정거리 3백km인 스커드(Scud)A 미사일을 개발·발사한 후 89년에는 사정거리 5백km인 스커드C 미사일을, 95년에는 사정거리 1천5백~2천km인 노동2호 미사일의 개발·발사에 성공했다. 38) 그리고 최근에는 사정거리 2천~6천km의 대포동 1,2호 미사일을 오는 2000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으며 약 1천톤에 이르는 화학무기를 生産·備蓄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sup>39)</sup>.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한·미 연합군은 대북한 감시 및 早期警報體制를 강화하고 전력증강을 추진

38)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pp.60~66 참조.

39) 金東明, “최근 북한의 정치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 「국방저널」 (1996년 9월), p. 74 참조.

하였다. 특히 주한미군은 북한의 스킨드 미사일과 대량 항공침투에 따른 전략거점의 파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994년 상반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192기를 搬入해 미군기지 주변에 배치하는 한편, 아파치 헬기 등을 도입하여 신형무기에 의한 戰力增強을 도모하였다.<sup>40)</sup>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핵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1994년과 1995년 팀스리피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기는 커녕 정전체제를 無力化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휴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자 한·미 양국은 有事時 증원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 조짐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항모 기동부대, 전투 비행단 등 迅速抑制戰力(Flexible Deterrence Option: FDO)을 1~3일 내에 한반도로 緊急配置한다는 전략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1995년에 들어 미국은 FDO와는 별도로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전투력증강(Force Enhancement: FE) 목록을 제공하였다. FE는 美항공모함, 전투비행단 및 해병원정군 뿐만 아니라 패트리엇미사일, 地對地미사일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군전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신속 전력배치 개념으로, 주로 전쟁 초기에 全面戰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력이다.<sup>41)</sup> 한·미양국은 1995년 11월 2~3일 개최된 제2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향후 2~3년간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FE 개념에 의한 한·미연합 군사대비

40) 「동아일보」 1994년 3월 23일자 참조.

41) 「동아일보」 1995년 11월 3일자 참조.

태세의 구축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전력 증강과 아울러 전시 소요에 대비한 전쟁물자의 事前備蓄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 9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美본토에서 증원된 미군이 사용할 자주포와 장갑차 등 1만여점의 전쟁비축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였다.<sup>42)</sup> 한·미 양국이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배치 차원에서 대규모의 군사장비를 들여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防衛費 分擔問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서는 한·미간 인식의 편차가 없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미국이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 우방에게 費用分擔을 촉구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防衛費 分擔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하며 합의점을 모색해 가고 있다. 미국은 특히 1991년 1월에 발발한 걸프전쟁을 契機로 한국측에 방위분담금 증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사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를 새로이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연합방위증강사업 및 군수분야 사업과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支援事業을 4개분야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액이 1990년 7천만 달러에서 1991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로 급상승하고 1992년에는 1억 8천만 달러로 20% 증액되었다. 43) 또 이 당시 한국은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5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을 중동지역

42) 「중앙일보」 1996년 9월 10일자 참조.

43)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p. 111 참조.

에 파견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 제23차 안보협의회의에서 戰時支援協定(Wartime Host Nation Support: WHNS)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韓半島 有事時 전투병력 위주의 증원군을 신속히 전개배치하고, 한국은 군수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모든 군수지원 활동은 비용부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전시지원협정의 체결로 有事時 대응태세가 강화된 만큼 한국측의 방위비 부담도 증가되었다.

한·미 양국은 1993년 11월에 열린 제2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8% 증액하여 1994년도에 2억 6천만달러를 지원하고 1995년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現地發生 비용의 1/3까지 부담할 것에 합의하였다.<sup>44)</sup> 1995년 11월 3일 폐막된 제2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종전 20% 수준에 달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증가율을 前年對比 10% 하향조정하여, 1996년 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sup>45)</sup> 이에 따라 95년 방위비 분담금 3억달러를 기준으로 96년 3억 3천만달러, 97년 3억 6천 3백만달러, 98년 3억 9천 9백만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측은 당초 한국경제성장을 10%와 물가상승을 7%를 고려한 17%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45억달러에 달하는 對北 경수로 지원 경비를 한국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과 약 6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적자 등을 고려하여 10% 수준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 문제가 대북 지원정책 및 한·미간 經濟·通商問題와 連繫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44)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p. 111 참조

45) 「중앙일보」 1995년 11월 4일자 참조

다.

### 對等한 協力關係 增進問題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는 가운데서도 미군의 주도적 역할을 점차 지원적 역할로 전환시켜 한국방어의 韓國化를 추진해 왔다. 1991년 3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2년 말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미군병력 100명이 한국군으로 代替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1992년 7월1일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던 地上軍構成軍司令部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하였다.<sup>46)</sup> 또한, 1993년 11월 제2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平時作戰統制權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平時작전권을 이양받아 44년만에 제한적이거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平時 작전통제권 還收는 새로운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契機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平時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지휘관계 조정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국의 국내정치적 象徵性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47)</sup> 平時作戰統制權 환수 후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상시의 경계임무 및 해·공군의 초계 활동

46)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서울: 국방부), p, 113 참조.

47) 현인택·이석중, "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한·미 동맹관계" 신정현 편, 「선진국 방의 비전과 과제」(서울: 나남출판, 1996) p. 170 참조.

등 일상적인 작전활동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반면, 한·미 연합사령관은 여전히 전쟁억제 및 준비, 그리고 휴전협정체제 유지 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권한 및 책임분담은 한반도의 기본방위계획이 有事時 미군의 증원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役割變更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등한 협력관계의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고 있다. 양국은 1991년 2월에는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Status of Force Agreement: SOFA) 내용중 不平等 條約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되어온 양해사항과 교환공환의 일부를 폐기한 바 있다. 1995년 말부터 한·미 양국은 개정된 SOFA에 포함되어 있는 불평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협상의 쟁점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 등 刑事裁判 管轄權 문제다. 협정 22조 5항은 “피의자가 미합중국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 한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sup>48)</sup>. 이처럼 모든 재판절차가 끝난 후, 즉 형확정후 범죄인 인도조항은 범죄 피의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사법관행에 비추어 미군에게만 特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SOFA에 준하여 기소단계에 범죄피의자를 인도하도록 한·미 행정협정을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측과 SOFA 개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48) 형사재판권 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연구」(서울: 도서출판 민, 1995), pp. 152~205 참조.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諒解覺書의 폐기를 협의하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사정거리 300km까지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미사일 통제체제(MTCR)에 한국이 가입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미사일 사정거리에 관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관한 협상은 조만간 타결될 것이다.

### 3. 多者間 安保協力

한·미 양국은 1980년대에는 소련이 제시한 동북아지역 평화체제 구축 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당시 소련은 중국의 외교노선 변화로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일본·중국간 전략적 동맹체제 구축을 우려하고 있었는 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안보의 취약성을 평화협정을 통하여 만회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域內 영향력 잠식만 초래할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또한 소련의 제안이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戰略的 劣勢를 모면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들어와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1991년초 걸프전쟁기간 동안 소련의 협조를 얻어 이라크 침략을 격퇴하게 된 이후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후기에 들어와 세계 경찰역할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은 탈냉전의 분위



기가 확산됨에 따라 北方政策을 통한 대외관계의 多邊化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탈냉전기를 맞이하여 한·미 양국의 외교정책이 다자간 안보대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자 199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회의 참석차 북경과 동경을 들린 베이커(James A. Baker) 미국무장관은 남북한과 주변 4강대국이 2+4 형태의 協議體를 구성하여 남북대화의 지원, 북한 핵위협 해소, 한반도의 긴장완화, 공동 안보관심사의 협력 촉진 등의 목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sup>49)</sup>. 그러나 베이커 장관의 이러한 構想은 한반도 문제는 주변국의 도움없이 먼저 남북한이 해결하겠다는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sup>50)</sup>

19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력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재래식 군사력 및 방위비 삭감을 지속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군비감축에 따른 우방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地域次元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활성화 및 분쟁이 전면전의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해소하는 豫防外交(preventive diplomacy)의 적극적 전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3년 3월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미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협의를 위한 다자간 포럼

49) 洪圭德,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38~39 참조.

50) 당시 남북한간에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同年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반도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10대 목표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다.<sup>51)</sup> 같은 해 7월 클린턴 대통령은 다자간 대화 추진을 「신타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의 根幹으로 제시하였다<sup>52)</sup>. 한편,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24일 「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대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5월 31일 외교협회 연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sup>53)</sup>를 모방한 mini-CSCE 형태의 동북아 多者安보對話 창설을 제의하였다.<sup>54)</sup>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安보對話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共感帶가 확산되자 샌디에고 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는 미국정부의 지원하에 1993년 7월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정부관리 및 민간인 학자를 초청하여 비공개로 「동북아 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 설립에 관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sup>55)</sup> 그리고 1993년 10월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1차 NEACD 회의에 북한측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5개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관리

51) Andrew Mack and Pauline Kerr, "The Evolving Security Discourse in the Asia-Pacific,"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5), p. 127.

52) Michael Richardson, "Clinton, With Eye on Trade, Calls for a Pacific Rim Summ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uly 9, 1993), p. 6.

53) CSCE는 1995년 1월 1일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4) 李瑞恒, "東北亞 多者間 安보對話·協力の 模索과 展望," 「統一問題研究」, 第5卷 3號 (1993年 가을), pp. 150~151 참조.

55)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군비통제」, 1995년 10월, pp 32~33 참조.

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민간인과 정부관리 공동의 常設協議體 건립 원칙에 합의했다. 그 후 NEACD는 동경·모스크바·북경·서울 등 개최장소를 바꿔가며 매년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같이 다자간 안보협력에 轉向的인 자세를 취한 한·미 양국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자 IAEA는 물론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國際共助體制를 형성하고 북한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자 일본은 북한과 수교협상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1994년에 들어 핵위기가 고조되자 일본은 한국·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유엔制裁를 추진하였으며, 유엔의 제재결정이 확정될 경우 즉각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sup>56)</sup>. 한편 중국은 1992년 8월 韓·中修交를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자 중국은 전략물자 공급을 대폭 감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북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一貫되게 유지하였다.<sup>57)</sup> 러시아는 일본·중국과 함께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국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인해 한

56) 1994년 6월 일본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비하여 人的 交流 規制, 학술·문화교류 규제, 그리고 상품·금융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對北韓制裁 10個項을 마련하였다. 김관봉, 「NPT와 북한 핵」(서울: 예진, 1995), pp. 147~148 참조.

57) 文興鎬,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1~12 참조.

반도문제에 적극적으로 介入하지 못하였다.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정부는 1994년 3월 24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남북한·미국·중국·일본·유엔·IAEA 등이 참가하는 8자회담을 제시하였다<sup>58)</sup>. 동북아의 질서 변동과정에서 약해져가는 自國의 位相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8자회담을 제안했던 러시아는 미·북 기본합의문이 체결되자 미국·일본·중국과 함께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 기본합의문이 체결되자 일본은 미국과 함께 KEDO 집행이사국이 되어 대북 경수로 지원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11월 15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일본은 한국·미국과 함께 3국의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對北關聯 韓半島 安保戰略會議 설립에 합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4년 10월 미·북 기본합의문이 체결되자 이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도록 설득하였다. 1995년 5월 이홍구 총리가 북경을 방문한 이후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남북한에 대한 等距離 外交를 취하며 한반도의 現狀維持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59)</sup> 제네바합의 이후 러시아는 한국과 군사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였다. 1995년 5월 러시아는 한국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교류 양해각서 및 군사비

58) 余仁坤,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 37 참조.

59) 향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申相振,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p. 65~88 참조.

밀 보호협정에 서명하고 군사협력 양해각서 및 방산협력 양해각서에는 가서명하였다<sup>60)</sup>.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強大國 地位 回復의 필요성을 느낀 러시아는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남북한 均衡政策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다 可視化시키고 있다. 남북한에 대한 等距離外交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성에 있어서 러시아측 지분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을 계기로 國際共助體制를 유지해 온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안보문제에 있어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새 질서 구축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및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쌍무동맹관계를 보완하여 동북아지역의 안보 不確實性을 제거하고 새로운 霸權國의 등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한·미와 共助體制를 유지하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戰略的 同伴者關係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동북아 안보협력체 발전에 障礙를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60)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pp. 117~118 참조.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아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NEACD에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지만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政治·安保問題 중심의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에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이 발전할 경우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두될 사항인 군사활동의 투명성, 인권문제, 민주화, 시장개방 등의 문제를 內政干涉으로 이해하고 있다.<sup>61)</sup> 중국은 특히 남사군도와 대만 문제가 다자간 안보회의에서 議題化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관계국간 직접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베이커 미국무장관이 제안한 2+4 형식의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미국 지배책략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者會談에 대해서도 損益을 계산 중이나 기본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간 안보회의 자체를 북한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기간내에는 동북아 안보협력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62)</sup>. 다자간 안보대화를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및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지도층은 현재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雙務協商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양자간 안보협력과 병행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함과 아울러 북한을 이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탈이념적 經濟優先主義 정책기

61) 장유탕, “東北亞 安保環境과 安保協力 展望,” 韓國國防研究院, 「東北亞 安保協力 問題點과 展望」(제1회 KIDA/RIPS 동북아 국방포럼) 1994년 6월, pp. 69~77 참조.

62) 이인호, “다자간 안보협력: 중국과 북한의 입장과 역할,” 이기택 외 공저,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서울: 일신사, 1996), pp. 557~559 참조.

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므로 다자간 안보대화는 장기적으로는 점차 制度化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加速化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美·日 新安保共同宣言이 채택된 이후 동북아 지역의 勢力構圖는 미국·일본 對 중국·러시아의 대립으로 可視化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한반도 주변정세가 國際的 共助體制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第Ⅳ章 韓·美 安保關係의 變化 展望

한·미 안보관계 변화의 決定要因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 변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의 정치적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의 변화요인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성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變化 樣態를 ①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②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의한 독일식 흡수통일, ③ 미·북 관계개선에 따른 남북한 평화공존의 3가지로 分類하고 각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변화를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南北韓 戰爭 再發 境遇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팽배해졌던 남북한간 긴장상태는 제네바 합의 이후 현격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대신 한국을 主敵으로 설정하여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전망은 여전히 不透明하다. 카리스마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국가를 상속한 김정일은 군부의 지지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이탈을 통제하기 위해 準戰時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戰爭이 再發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食糧難이 더욱 악화되어 주민폭



동이 발생하거나 정권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 집권층은 체제내적 위기를 외부로 분출시키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현재 남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6백여기의 스커드 및 프로그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여 남한 전지역을 射程圈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할 수도 있다는 誤判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간 군사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하게 되면 미국은 기존의 주한미군 이외에 약 40만명의 병력을 미국 본토로부터 增援·配置할 것이다.<sup>63)</sup> 그리고 한·미 연합군은 한·미 연합작전계획 (CFC OPLAN) 5027에 의하여 북진통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sup>64)</sup> OPLAN 5027에 의하면 한·미연합군은 전쟁징후가 보이면 제1단계로 미국 본토에서 迅速抑制戰力을 한반도에 배치하여 전쟁을 豫防한다.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장거리포와 다탄두 미사일로 한국의 전후방을 포격하고 특공대를 투입시키면 제2단계 작전에 들어가 공군력과 미사일로 북한의 심장부를 강타해 남침을 휴전선 이북에서 저지한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주요 전투력을 격멸하고 휴전선을 돌파한다. 제4단계에서는 평양을 점령하고 청천강 지역까지 북상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63) 게리 럭(Gary E. Luck) 주한미군 사령관은 1994년 3월 1일 美의회 上院 軍事委員會 청문회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기존의 3만 7천 주한미군 외에 40여만명의 병력이 增援·配置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4년 3월 23일자 참조.

64) 1994년 3월 23일 李炳台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보복을 실시하고 양상에 따라 이를 統一戰役 수행의 기회로 連繫시키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4년 3월 24일자; 「세계일보」 1994년 3월 25일자 참조.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전쟁이 끝나고 일정기간의 軍政을 거쳐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한·미 연합군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정권을 潰滅시킨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中東地域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이 지역분쟁에 군대를 파견했을 경우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신속한 增援·配置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더우기 6.25 동란때와 같이 중국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의 국내여론이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허용할지 未知數이다. 이와 같이 중동지역과 한반도에서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나 중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될 경우 남북한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전협정을 맺고 재분단의 惡循環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65)</sup>.

중국이 介入을 주저하는 상태에서 한·미 연합군의 신속한 작전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미 양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敵對인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에 新冷戰體制를 형성하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인 바,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관계는 더욱 강

65) 고승우, 「논리로 떠나는 한반도 통일여행」, (서울: 이가책, 1995), pp. 77~81 참조.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軍政이 종료되는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統治權 問題로 정치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66)</sup>.

## 2.北韓의 急激한 崩壞 境遇

북한지역에서 식량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폭동이 발생하고 북한 군과 경찰 등 물리적 억압기구가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급격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외세의 개입이 차단되면 한국은 서독이 동독을 통합한 방식으로 북한을 吸收統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미 양국의 군사적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휴전선 근처에서 남북한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全面戰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남북한 평화통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가 요구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국

66)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므로 유엔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단순한 交戰團體가 아닌 國家이다. 따라서 유엔軍司令官의 작전지휘에 따라 무력통일을 이룩할 경우, 북한지역에는 占領軍司令官인 유엔군사령관의 군정이 실시되게 된다. 한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지역의 점령이 失地回復이 되는 바, 통일 즉시 통치권 행사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지역의 통치권 문제로 견해 차이를 노출할 수 있다. 金明基, “統一 이후 國際聯合軍과 美軍의 撤收에 관한 國際法的 檢討,” 「國際問題」 (1996년 2월), pp. 8~17 참조.

·일본·러시아 등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民族自決權을 보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韓半島化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 한·미 양국은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한 2+4회담을 개최하여 주변국들이 선거를 통한 남북한 단일정부 수립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統一外交의 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中立的 姿勢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엄청난 亂民이 밀려와 경제·사회적 곤경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고 있으며, 북한붕괴의 파급효과가 鄧小平 이후 중국이 처할지도 모를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호적 또는 중립적 태도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수립문제는 한·미간 안보협력의 가장 중대한 事案이 될 것이다.

2+4회담은 주변4강의 협력을 慣例化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바,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制度化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軍事的 信賴構築 및 군비통제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통일한국은 주권국으로서 최소한의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전쟁억제로부터 동북아지역 안정으로 그 중점을 이동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는 동북아지역 勢力均衡의 調整者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재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한·미 양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협력관계로 전환된다면 한·미 양국은 군사적 동맹을 유지해야 할 근거인 共同的 敵에 대한 동질적인 威脅認識<sup>67)</sup>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사동맹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한·미간 안보협력은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함께 형성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틀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共同生存과 繁榮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다.

### 3. 南北韓 平和共存 境遇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제네바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미·북관계는 일단 순조롭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對北 경제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미국과 경제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북한은 일단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경제구조의 改革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1999년경 군사력 증강에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반면, IAEA의 特別査察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시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實用主義的인 방향으로 전면적인 政策轉換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의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 미·북관계는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미·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병행하여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은 미·북관계 개선의 速度와 範圍에 관한 견해 차이로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한·미간 대북정책의 불협화음은 특히 특별사찰 및 국교정상화 시점을 둘러싸고 증폭될

67) 양성철·문정인, “한·미 안보관계의 재조명: 푸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 리사례를 중심으로,” 김덕중 외 공편 「한미관계의 재조명」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 48 참조.

우려가 있다. 한국에 吸收統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측에 핵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즉시 국교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이 可視化되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 및 동북아지역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편의상 북한의 요구에 호의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서는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미·북간 國交正常化를 容認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간 국교가 수립되는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감소하는데 비례하여 한·미 군사협력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미·북간 국교가 수립되면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되고 주한미군은 일정 수준 감축되어 補助的 位置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미 군사협력은 韓半島 危機管理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有事時에는 미 본토에서 신속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재구축할 것인 바,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제는 增援待機 安保同盟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sup>68)</sup>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일논의가 성숙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은 더욱 감소하여 주한미군은 주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한 迅速對應軍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사태에 전력을 투사하게 되면 한·미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비율은

68) Jonathan D. Pollack &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RAND, 1995), pp. 28~29.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될 것이다.

위의 3가지 시나리오는 남북관계 및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 중 논리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만 선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3가지 시나리오중 북한의 군사력, 북한정권의 사회통제력, 동북아지역의 세력판도, 한·미 양국 및 주변강대국들의 대북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장기간 평화공존을 유지하며 한·미 동맹관계가 점진적으로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상정한 세번째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適實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군사력에서도 점차 남한에 대한 優位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은 점차 실현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북한의 급격한 몰락에 의한 吸收統一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급격한 세력 변화를 원하지 않는 주변강대국들이 북한의 연착륙을 지원하며 한반도 문제에 介入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주변4국간의 상호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二重構造를 보이고 있어 2+4회담을 통한 평화통일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세번째 시나리오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북관계가 진행되더라도 그 전개과정에서 북한의 보수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남북한간 전쟁이 돌발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통일에 따른 後遺症을 最小化하기 위해서 세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 第V章 韓·美 安保協力 發展 方案

### 1. 基本方向

냉전시대에 이념적 유대에 기초하여 형성된 한·미 동맹관계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공통의 國家利益을 바탕으로 하여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게 維持·發展시키기 위해 양국은 먼저 脫理念化된 상태에서의 國益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리하고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찾아 공통이익의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간 相沖되는 국익에 관해서는 優先順位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변강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 추세와 점차 다원화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관계는 단순히 쌍무관계 차원에서 재정립될 수는 없다. 향후 한·미 안보협력은 한국의 통일정책과 對아시아정책을 고려한 상태에서 包括的인 增進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협력을 軸으로 하여 주변강대국들과 다자간 안보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북관계에서 한국의 정책적 自律性을 증진시켜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安着시킨다는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하여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調和·並行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敵對的 現實과 북한체제 변화의 不確實性을 고려할 때 한·미간 협력관계는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체제의



핵심은 한국이 主導的 役割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북한지도층이 체제붕괴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미·북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앞서 개선되어 가는 것을 容認해야 한다. 따라서 韓·美 共助體制도 대북협상과정에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 한·미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좁은 의미보다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는데 한·미 양국이 협력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의 對北政策은 短期的으로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中·長期的으로는 북한의 開放·改革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미 軍事同盟體制가 확고함을 과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배양하여 한국이 점차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主導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 국방능력이 향상되면 북한 지도층도 대미 평화협정 요구가 무의미함을 시인하고 한국과의 평화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사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自主적으로 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전쟁억지만을 위주로 한 한·미 안보협력은 더 이상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地域情勢의 不確

實性內에 潛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軸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도 주도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유동성에서 초래되는 不確實性を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部門別 推進方案

### 가. 對北政策 協力方案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유지와 대북 영향력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핵동결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점차 개선시킬 것이다.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실시할 시점에 이르면 한국은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의 並行原則을 다시 한번 미국측에 周知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품 수출입 제한 해제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완화조치는 군사정전위원회 기능 회복과 連繫시키도록 對美 外交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조치들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여론의 反作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싱턴과 평양에 連絡事務所가 개설되면 미국과 북한은 투자협정, 차관협정 등 경제통상협상과 아울러 미군유해 송환협상 및 미

사일수출 통제협상 등 군사적 분야의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북간 人的 交流가 확대되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간 진전 속도의 괴리는 상당부분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면 한·미간 대북정책에 관한 異見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즉,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의 미·북관계 진전은 한·미 양국의 의견 불일치 영역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한·미 양국은 시차를 두고 政策共助를 유지하는 등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개입과 확대의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을 포용하고 국제사회로 軟着陸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고 具體性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내부정세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와 국내정치의 필요성 등 狀況에 따라 可變性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의 異見은 많은 경우 미국이 한국측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측이 설득력있는 政策構想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면 한·미간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하게 될 것이다. 한·미간 정책조정 은 한국측의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청사진이 정립된 이후에 생산적일 수 있는 바, 한국은 먼저 구체적으로 추구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수단,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행동계획 등을 명백하게 정립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 공조체제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主導

的 役割을 수행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될 수 밖에 없다. 경수로 지원 사업 및 대북 식량 지원 등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비용부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한국측이 떠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미·북관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간에懸案이 되어 있는 대북정책 문제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정리하고 이를 한·미간 학술회의, 의원외교, 미국내 로비활동 등을 통해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상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 경수로 공급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監理役割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PC의 역할 문제는 남한측이 재정지원이라는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미간 기술적인 차원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수로 비용부담 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再選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 이후로 협상을 지연시켜 1997년 클린턴이 재선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타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부한다면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한편, 한국이 非人道的인 정책을 택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人道的 次元에서의 곡물지원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규모 직접지원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당국간 회담을 수용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쌀이 軍糧米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는 前提條件은 固守해야 한다.

미국은 향후 북한과 미군유해 송환협상, 미사일협상, 무기수출 금지협상 등의 군사협상을 지속해 갈 것이다. 미국과의 군사접촉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수출통제 및 군비감축문제를 평화협정과 一括妥結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규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事案別 個別協商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으로서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 및 미국의 세계적 전략차원과 관련된 미사일 수출통제 문제에 관해서 진행되는 미·북간 군사접촉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군사분계선에서 발생된 문제들과 남북한 군비통제와 연계된 문제들은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固守해야 한다.

미·북관계가 개선되어 미국 기업의 대북진출이 활성화되면 일단 북한의 開放·改革을 촉진시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利潤追求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개방에 逆機能을 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미국 기업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한 북한 산업을 무차별 先占할 경우 한·미관계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가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나. 軍事協力 增進 方案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對南 赤化戰略을 고수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남 군사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대부분 핵시설을 동결했지만, 과거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약 5년후 IAEA의 특별사찰 수용시점까지 이미 생산해낸 핵물질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5년후에는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과 軍事的 均衡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여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이 迅速抑制戰力을 적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조기경보 및 감시체제를 한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북한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를 한국측에 즉각적으로 제

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군은 한·미 정보기술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점차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sup>69)</sup> 한·미 양국이 대북 경계 태세 및 연합방위력을 증진시켜도 북한의 잠재적 핵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미국은 최소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여 핵개발의 과거 투명성을 보장할 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대북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발전되는 도중에도 韓國防禦의 韓國化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체제를 점차 한국주도의 전략적 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상호 보완적인 安保同業者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모두 共感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平時作戰統制權은 물론 점차 전시작전통제권도 還收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한 기습 침공 가능성, 한국군의 대규모 전쟁기획능력 부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 목적으로 구축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방어의 한국화를 人爲的으로 추진하는 데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미군은 전쟁기획·지휘통제·정보수집 등에서 한국군보다 능력이 우세한 바,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 미군의 방위비

69) 김철환, “한국군의 군사기술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군사논단」 통권 제4호 p. 51 참조.

분담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반도 平和維持를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위비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대북 전쟁억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측이 무조건적 부담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경제력 향상을 빌미로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증액요구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은 한반도 내외의 안보상황을 비롯,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추이, 한국정부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미 군사협력관계는 점차 단순한 비용분담의 차원이 아니라 責任分擔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미 군사협력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安保同伴者 관계로 성숙되기 위해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내포되어 있는 不平等한 要素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미국의 확고한 對韓防衛 의지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능력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의도를 포기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場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로 인해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再調整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격히 감소한 시점에서 한국의 자주성만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북아의 勢力版圖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지속하며 미군의 한국주둔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보다 水平的인 관계로 재정립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 즉 한



국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위상을 駐日美軍과 같이 並列形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sup>70)</sup>.

남북한이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북한을 適으로하여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의 성격이 바뀌어 남북한과 미국이 공동생존을 목표로 한 협력안보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平和共存 기간 중에도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도 한국은 통일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시점에 달해서는 한국은 외세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통일을 前後하여 한국은 전쟁억제보다는 대내외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및 주변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구축되어 한·미동맹체제가 점차 地域安保協力の 성격도 내포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한·미 군사협력과 관련한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주변지역의 분쟁사태에 대응하는 기동군의 성격을 내포하게 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작전출동을 견제 내지는 통제하는 협의조항을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본이 갖고 있는 주일미군의 작전출동에 대한 事前協議權 정도를 확보

70) 吳寬治 外 共著, 「韓·美 軍事協力關係의 發展과 展望」 (서울: 世經社, 1990), pp. 176~204 참조.

해야 한다.<sup>71)</sup> 따라서 향후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안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역 밖의 작전출동에 대해 留保的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 다. 多者間 安保協力 推進方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와 동북아질서의 안정유지에 이익을 共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렛대가 없는 한편, 동북아질서 유지는 쌍무적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일본 등과 쌍무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간 안보대화를 주도하여 지역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국 또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북한의 핵 개발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안보대화를 活性化하여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參與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대북정책과 對周邊國政策은 각기 다른 시발점에서 출발하였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후하여 결국 合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한 평화협정이 국제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實效性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에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제주선언에서 제의한 남북한·미국·중국의 4者會談을 북한이 수용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의 학자와 정부

71)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韓·美 安保協力체제 發展方案」 民主平統 示唆資料 13,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6.5), p. 43 참조.

관료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안보대화 채널인 동북아 협력대화(NEACD) 및 아세안 지역포럼(ARF)에의 북한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ARF는 아·태지역에서는 최초의 정부차원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바, 한·미 양국은 ARF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4者會談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이 민간인 전문가, 외무부 관리 등을 통한 다자간 안보대화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강대국들에 대한 軍事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군사정보의 교류 등을 증진하여 주변강대국들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북한 군부와도 대화채널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4者會談이 성사되어 남북한·미국·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 합의하게 되면 4者會談에서 체결한 평화협정을 再保障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한 2+4형태의 동북아 多者間 安保對話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2+4형태의 다자간 안보회담이 개최되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재보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지역전체의 공동 안보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는 주변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潛在的 軍事威脅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재보장을 계기로 域內國家간 협력분위기가 성숙되어가면 점차 외무·국방장관 회담, 군고위인사 협의회, 실무자 회담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常設機構화해 나가야 한다.

## 第Ⅵ章 結 論

지난 40년간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자유주의 체제 수호에 긴밀히 협력하였다. 특히 주한미군의 引繼線(trip wire)으로서의 역할은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는 순간 미군과 교전 상태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심리적 위협을 줌으로써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가운데 체제 유지 수단으로 核開發에 박차를 가했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것도 사실 미국의 對韓防衛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 관계는 점차 군사동맹의 성격이 약화되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包括的 安保協力關係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對南 敵對政策 버리지 않고 전쟁위협을 계속하며 실질적인 開放·改革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韓·美 共助體制의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확고함을 북한측에 과시하는 한편, 대북 협상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일본·러시아 등과도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對美 平和協定 체결 요구를 포기하고 한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전쟁억제에서 동북아지역 평화유지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多者間 安保協力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代替할 수는 없다.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참여국 전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豫防外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위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참여국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단합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남북한 평화공존 기간에도 북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 통일시점을 전후한 대내외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미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강성학 외 공저.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1996.

姜元植 外 共著.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고승우. 「논리로 떠나는 한반도 통일여행」. 서울: 이가책, 1995.

具永祿 外 共著. 「韓國과 美國: 過去, 現在, 未來」. 서울: 博英社, 1983.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서울: 국방부, 1994.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國際問題研究所. 「防衛年鑑, 1994~1995」. 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94.

吉烜宇 外 共著.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吉炆宇 外 共著.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김관봉. 「NPT와 북한 핵」. 서울: 예진, 1995.

김덕중 외 공편. 「한·미관계의 재조명」.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88.

金明基. 「駐韓國際聯合軍과 國際法」.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4.

金聖翰. 「脫冷戰期 國際關係와 韓·美同盟體制」.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5.

文昌克. 「한·미 갈등의 해부」. 서울: 나남, 1994.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韓·美 安保協力체제 發展方案」. 서울: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1996.

閔丙天 編著. 「北韓의 對外關係」. 서울: 大旺社, 1987.

백종천·이민룡. 「한반도 공동안보론」. 서울: 일신사, 1993.

신정현 편.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서울: 나남출판, 1996.

安秉俊. 「脫冷戰期の 國際政治와 韓半島統一」. 서울: 法文社, 1993.

余仁坤.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吳寬治 外 共著. 「韓·美 軍事協力關係의 發展과 展望」. 서울: 世經社, 1990.

吳淇坪. 「한국의교론: 新國際秩序와 不確實性的 論理」. 서울: 오름, 1994.

柳仁澤. 「韓半島軍事問題의 理解」. 서울: 法文社, 1996.

이기택 외 공저.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서울: 西江大學校 出版部, 1986.

이석우. 「한미 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1995.

이춘근. 「北韓 核의 問題: 發端, 協商過程, 展望」. 서울: 세종연구소, 1995.

全東震.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鄭玉任. 「北核 588日!: 클린턴 行政府의 對應과 戰略」. 서울: 서울 프레스, 1995.



車榮九. 「軍事的 側面에서 본 國內·外的 統一의 條件과 樣相」. 國  
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1992. 6. 19.

최규장. 「외교 정책 결정 과정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백지  
화 과정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93.

韓國國防研究院. 「東北亞의 安保協力 問題點 및 展望」. 서울: 韓國  
國防研究院, 1994.

洪圭德.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  
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Bailey, Sydney D.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Bergsten, C. Fred and Sakong, Il.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United States Cooper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5.

Collins, John M. *Korean Crisis, 1994: Military Geography,  
Military Balance, Militar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1, 1994.

Davis, Zachary 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9, 1994.

Kim, Se-Jin.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Mazarr, Michael J.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Niksch, Larry A. *South Korea: U.S. Defense Oblig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 1994.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Updated June 2, 1995.

Pollack, Jonathan D. & Cha, Young Koo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RAND, 1995.

Sutter Robert G. *Korea: U.S.-South Korean Issues In The 1990s.* CRS Issue Brief. Updated October 20, 1994.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 2. 論文

金國鎮.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국방위.” 「군사논단」. 통권 제4호. 1995 가을.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군비통제」. 1995. 10.

金明基. “北韓核에 관한 美·北基本合意書와 國際法.” 「국제문제」. 1995. 3.

김정익.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국국방.” 「국제정치논총」. 제35집 2호. 1995.

金昌秀. “金日成 死後 美·北韓關係의 發展方向.” 「政策研究」. 通卷 第116號. 1994.

金鐵煥. “한국군의 군사기술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군사논단」. 통권 제4호. 1995 가을.

로버트 매닝(Robert A. Manning). “대북정책: 우왕좌왕 한국 무전략 미국.” 「신동아」. 1995. 10.

문정인·문상균. “미국의 군사력 감축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래식 군사력-총량평가.” 「전략연구」. 제1권. 1995.

吳寬治. “한국방위의 한국화 보다 구체화 될 것.” 「월간중앙」. 1994년 12월.

李瑞恒. “東北亞 多者間 安保對話·協力の 模索과 展望.” 「統一問題研究」. 第5卷 3號. 1993 가을.

李春根. “한·미연합 억제전략체제의 발전과정.” 「군사논단」. 통권 제4호. 1995 가을.

Bayer, James A.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Agreed Framework: How Not to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Fall-Winter 1995.

Fisher, Richard D. Jr. "Building a More Secure Asia through Missile Defense." Heritage Foundation, *Asian Studies Center Backgrounder*. No. 138. October 24, 1995.

Lehman, Ronald F. "Some Considerations o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Ques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6, No. 2. Winter 1994.

Mack, Andrew and Kerr, Pauline. "The Evolving Security Discourse in the Asia-Pacific."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5.

Mazarr, Michael J. "The U.S.-DPRK Nuclear Deal: Status and Prospect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9, No. 3. Fall 1995.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96-05 러시아大選結果分析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

---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研究報告書 96-07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0월 일

發行日 1996년 10월 일

---

---